

정부의 대학 재정 확충과 지원방식의 변경을 기대한다

큰 대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서구의 주요 선진국과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에서는 대학 재정을 국가가 담당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들 국가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형식적인 금액만을 내며, 영국 및 동구권 국가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도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국·공립 대학과 함께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사립대학 제도는 엘리트 교육을 실시해 온 서구의 대학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해 온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특징적 제도이며, 이와 같은 전통과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우리의 사립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계속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대학은 국민의 지대한 교육열에 힘입어 사립대학 위주로 급속히 팽창되었다. 또 사립대학 수의 반도 못 되는 국립대학조차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은 국가 재정보다는 오히려 학부모의 '대학교육세' (?)에 의존해 온 셈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NP가 만 불에 달하고, OECD 가입이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화 시대의 지도적 인력 양성을 담당해야 할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WTO 체제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대학교육을 질적으로도 이에 걸맞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학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대학 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학 재정 중에서도 우선 정부의 대학 지원 재정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는 공교육 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998년에는 GNP 대비 5%까지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향후 3년간 GNP 증가에 따른 11조 원과 GNP 대비 비율 증가에 따른 9조 5천억 원 정도를 합한 20조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교육 재정이 확보된다. 정부는 이 추가 확보 재정의 1/3 이상을 대학에 투입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 확충과 함께 그 지원 방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대학재정 지원정책을 심의할 가칭 '대학재정위원회'를 설



전북대 총장 장 명 수

치했으면 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각 대학의 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3년간의 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정부의 대학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은 경상비, 대형 시설비, 연구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대학 재정위원회는 이 중에서 주로 각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배정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대학에 배정될 경상비는 대학의 유형, 교수수와 학생수, 대학 개혁의 성과, 대학 재정 운용 평가 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고, 이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한다. 포괄 예산제는 각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각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는 대학재정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학의 대형 시설비는 경상비와는 달리 대학의 유형과 각 대학의 역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 재정 중 대형 시설비의 비율은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국립대학에 대한 대형 시설 예산은 당분간 교육부에서 조정하여 배정하도록 했으면 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의 신·개축, 시설 관리 경비는 경상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과 함께 현대 대학의 중추적 기능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이·공계를 중심으로 연구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는 빈약하기만하여 대학의 연구 재정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 재정은 교육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재원은 물론 연구 재단, 산업체 등의 민간연구재원으로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비는 각 학문 분야별 우수 연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되, 교육부의 연구비는 주로 대학 연구 여건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연구 지원 인력의 확충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개선은 대학 발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걸맞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충된 대학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식 개혁이 대학 발전의 또다른 필요 조건임을 강조해둔다. ■